

'무료치과진료 약정서' 노 대통령에 전달 "노인 1만5000명에 인센 베풀겠다" 진명 노 대통령 "참여복지 느껴" 만족감 표시

치협이 저소득층 노인 1만5천명에게 진료사업을 펼치는 '무료치과 진료사업 약정서'를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盧 대통령은 "치협의 고마운 선물로 이것이 참여복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무료치과 진료사업은 치협 집행부만의 자부심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골고루 자부심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鄭在奎(정재규) 협회장, 安聖模(안성모), 金洸植(김광식) 부회장, 尹斗重(윤두중) 총무, 張永俊(장영준) 홍보이사는 6월 17일 오후 청와대를 예방, 盧 대통령을 접견했다.

치협 집행부의 이번 盧 대통령 단독 접견은 참여정부 출범 후 전문가 단체로는 최초이며 역대 정권에서도 드문 일이다.

특히 치협 80여년 역사상 치협 회장을 비롯, 집행부가 독대한 것도 처음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날 접견에서 鄭 협회장은 "새 정부가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참여복지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의무와 사망감을 갖고 함께 어우러져 사회적 복지를 추진, 복지 주체와 그 객체 모두 혼연일체가 돼 신바람 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국 치과의사들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에너지가 되고자 음식을 섭취조차 어려운 무의탁 독거노인 등 저소득 노인 1만5000여명에게 무료치과진료 사업을 추

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盧 대통령은 "참여복지 내용에는 암체복지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사실 어려웠다. 정부가 할 일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복지는 미국 클린턴 정부의 정부 혁신론에서 예산절감과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보고된 '좋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盧 대통령은 특히 "오늘 치협이 고마운 선물을 줘 이것이 참여복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참여 정부 취임 후 전문가 단체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치협 추진사업이 집행부의 자부심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 치과의사 모두가 골고루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盧 대통령은 또 "이것이 치과의사 아버지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치협과 치과의사들이 어려운 일을 한다. 치과의사들이 고충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 건의해 달라 정부차원에서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鄭 협회장은 이어 전국 저소득층노인 1만5000명에게 의치를 무료로 장착해 줄 것을 약정한다는 약정서를 盧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날 접견은 주무부서 장관인 金花中(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도 배석한 가운데 시중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으며, 예정 접견 시간 보다 10여분 초과된 30분간 이뤄졌다.

의치사업 만장일치 찬성 전국지부장협, 자발적 참여 결의

전국 지부장들이 저소득층노인 무료치과진료사업과 관련,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제3차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김건일)가 6월 28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군진지부장을 제외한 17개 지부 지부회장, 정재규 협회장, 윤두중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지부장들은 저소득층노인 무료치과진료사업은 정부 주도의 사업이 아닌 치협 차원의 자발적인 사업임을 강조하고 치과계 위상제고와 올바른 치과의사상 구현 등을 위한 실천 사업으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정재규 협회장은 참여정부 출범 후 전문가 단체로는 최초로 청와대를 방문, 노무현 대통령을 단독 접견하고 '무료치과진료사업 약정서'를 전달하기까지의 활동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며 치협 주도로 이뤄지는 무료치과진료사업에 많은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 협회장은 "무료치과진료사업은 전국 치과의사 모두가 골고루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밝힌 바 있다"며 "치과계의 자발적인 참여는 노 대통령이 주창하는 참여복지에도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현 정부에 치협을 각인시키는 효과와 함께 치과계 현안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인정의 대책 연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비롯해 경제특구 의료개방 문제의 건, 영수증 발행의 건 등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경제특구 의료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천, 부산, 광양 지역의 해당 지부는 의료 질 저하 등 우려를 표명했다. 또 무적 회원 처리에 관한 건은 치협 건의안으로 처리했다.